

상생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발전모델과 정책방향 -

2006. 5. 24

산 업 자 원 부

목 차

< 제 1 부 > 상생협력 발전모델

I. 기업환경 변화와 기업간 협력에 관한 이론	2
II. 상생협력의 이론적 모형과 타당성	3
III. 상생협력 발전모델	9
IV. 상생협력 실증분석	13
V. 상생협력 발전을 위한 제언	15

< 제 2 부 > 상생협력 정책평가 및 향후과제

I. 정책수단의 체계화	17
II. 상생협력 지원정책의 평가	18
III. 향후 정책과제	24
IV.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확립	42

제 1 부

상생협력 발전모델

I. 기업환경 변화와 기업간 협력에 관한 이론

기업환경의 변화

- 과거 기업경쟁력은 주로 노동, 자본 등 물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었으나, 혁신주도형 경제하에서는 핵심기술과 지식, 특히, 공급사슬(Supply Chain)의 경쟁력이 중요
- 글로벌 대기업들은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융·복합화에 대응하여 핵심역량만 내부화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하는 추세
➔ 기업의 공급사슬 관리가 중요
- 공급사슬 관리는 곧 거래기업과의 협력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 현실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일맥상통

기업간 협력에 관한 經濟學적 흐름

- 경제학에서는 19세기 이후 제도학과 신제도학을 중심으로 기업간 협력의 경제적 타당성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발전
 - 제도학파는 1880년대 T.B.Veblen을 중심으로 탄생하여 시장에 의한 자율조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업간 협력의 필요성 강조
 - 신제도학파는 R.Coase¹⁾의 거래비용이론을 기점으로 발전하였으며, 기업간 협력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

1) 199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거래비용이론은 그의 제자 O.E. Williamson에 의해 발전. 시장실패 하에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간 협력관계가 형성됨을 강조

- 신제도학파적 접근은 D.C.North²⁾의 신제도이론, K.J. Arrow³⁾의 신뢰자산이론, Von Neumann의 게임이론⁴⁾, G.Akerlof⁵⁾의 역선택이론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 이론은 기업간 협력을 설명하는 주류이론으로 발전하고 있음

기업간 협력에 관한 經營學적 흐름

- 경영학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 기업간 협력을 주요 경영전략으로 인식하고 공급사슬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
 - 공급사슬전략은 C.Fine(MIT대학 교수)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거래비용이론의 영향으로 이론의 정치성과 타당성이 높아짐
 - S.Helper(Case Western Reserve대학 교수)의 Voice · Exit이론과 J.Barney(OSU대학 교수)의 핵심역량이론은 부품업체의 역량을 중시
 - J.P.MacDuffie(Wharton school 교수)와 M.Sako(Oxford대학 교수)는 신뢰를 통한 조립-부품업체 핵심역량의 효율적 연결을 강조
 - M.Iansiti(Harvard대학 교수)의 기업생태계이론과 I.Nonaka(히토쓰바시대학 교수)의 지식창조기업이론은 외부의 혁신역량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혁신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

2)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적 구조로서 기업간 협력의 중요성 강조. 199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3) 197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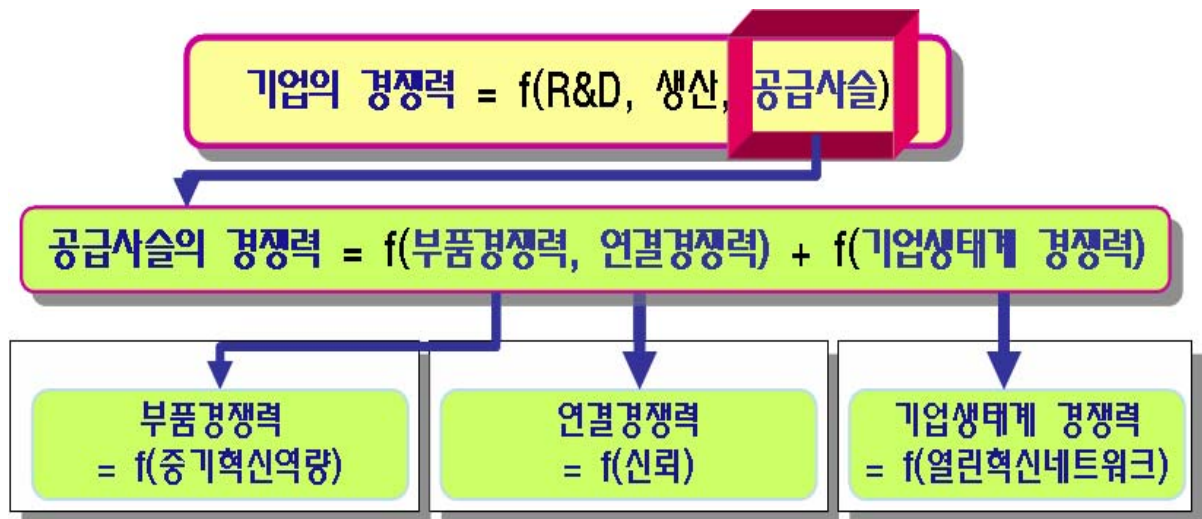
4) 경쟁주체가 상대방 대응행동을 고려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행동을 분석 (예: 죄수의 딜레마)

5)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II. 상생협력의 이론적 모형과 타당성

1. 기업간 협력이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 기업의 경쟁력은 R&D, 생산, 공급사슬 등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C.Fine, 1998)



2. 공급사슬의 경쟁력 결정변수

① 부품경쟁력 = f(중소기업 혁신역량)

- 부품업체 확보전략은 권고전략(Voice)와 퇴출전략(Exit)으로 구분되나 장기적으로는 권고전략이 유리(S.Helper, 1990)

Voice 부품업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기업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품업체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공동으로 문제해결
ex) 일본의 자동차업체와 부품업체 관계

Exit 부품업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기업은 부품업체를 지원하기 보다는 다른 부품업체로 교체
ex) 미국의 자동차업체와 부품업체 관계

- 특히, 완제품 시장이 경쟁적일수록 권고전략이 유리
(Helper&Levine 명제, 1992)

(사례) 미국에 비해 완성차 시장의 경쟁이 심한 일본 자동차업계는 권고 전략을 채택했고, 부품업체와의 밀접한 의사소통 덕분에 신차개발에 소요되는 총 엔지니어링 시간이 미국의 1/3에 불과
(前 Harvard Business School 학장, K.Clark)

⇒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수록 대기업은 권고전략을 채택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유리

② 연결경쟁력 = f(신뢰)

- 조립-부품업체간 연결경쟁력이 공급사슬의 경쟁력을 좌우
(T.Fujimoto 동경대 교수, 아키텍처 이론, 2002)

(사례) 일본의 173개 조립업체와 81개 장치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조과정에서 기업간 조정과 협조가 많이 일어나는 분야일수록 국제 무역에서 경쟁력이 높게 나타남(일본 경제산업성, 2004)

- 연결경쟁력은 윤희유 역할을 하는 신뢰(Trust)가 관건
(K.J.Arrow, 1974, J.P.MacDuffie, 2005)

(신뢰의 경제적 효과)

- 신뢰는 기업경쟁력의 원천(J.Barney, 1994)
- 신뢰는 조직간 거래비용을 감소(O.Williamson, 1985)
- 신뢰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감소시키고 형식적인 계약서가 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조정과 협력을 증진(P.Ring Loyola Marymount대학 교수, 1992)
- 신뢰는 장기간 약속을 가정하기 때문에 부품업체로 하여금 대기업에 적합한 관계특정적 자산에 기꺼이 투자하게 함(M.Sako, 1998)

(불신의 효과)

신뢰가 부족하면 대기업은 단기수익 극대화를 위해 가격인하를 고집하고 중소기업은 저원가제품을 만드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발생하여 레몬시장(lemon market) 출현(G.Akerlof, 1970)

○ 신뢰는 '공정거래'와 '가치공유'에서 창출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계약을 성실히 지킬 때 계약형 신뢰(contract trust)가 형성됨(M.Sako, 1998)
- 높은 수준의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로 해석할 수 있는 공동의 가치공유 필요(T.Parsons Harvard대학 교수, 1969)

⇒ 공정거래와 가치공유를 통해 중소기업과 상호신뢰 관계를 형성한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유리

③ 기업생태계 경쟁력 = f(열린혁신네트워크)

- 기업간 경쟁은 "기업이 소속된 생태계간의 경쟁"이며, 세계 초일류기업은 창조적이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성공 (M.Iansiti, The Ecology of Strategy, 2004)

기업생태계란?

기업환경의 테두리 내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통합하여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들과 강력한 共進化(co-evolution)를 꾀하는 경제적 공동체

- 창조적인 기업생태계는 새로운 지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선보임으로써 형성됨 (I.Nonaka, 지식창조기업이론, 1995)

- * 지식창조를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가치있는 아이디어가 신제품개발로 연결되는 열린혁신시스템(Open Innovation System)이 중요
(H.W.Chesbrough Harvard대학 교수, 2003)
- * 1990년대 초반 포춘 100대 기업중 75%가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사내벤처를 설립했으나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여 사내벤처가 기획한 사업을 모기업이 채택한 경우는 5% 미만에 불과 ⇨ 내부 혁신패러다임의 한계

(사례) 벤처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Intel

- Intel은 신기술 획득을 통한 최상의 경쟁력 유지 및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벤처기업을 전략적 파트너로 활용
 - ‘91년 Intel Capital 설립 후 현재까지 1,000여개 기업에 총 40억 달러 이상을 투자(주로 지분투자형 네트워크)
- 중소벤처기업에게 기술개발단계부터 마케팅단계까지 전방위 지원
 - Intel Research, Intel Lab 등을 통한 기술지원 뿐 아니라 시장변화 대응 역량 지도 및 잠재적 파트너와의 연계 지원



중소벤처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자사의 핵심역량을 확대하는 상생의 전략 실현

- **건강한 기업생태계**는 기업들이 핵심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지역경제, 소비자 등 기업생태계에 재투자함으로써 형성

(사례) 노키아와 울루 테크노폴리스(Oulu Technopolis)

- 핀란드는 노키아 연구소 및 울루 IT대학 등을 중심으로 세계 최대의 기업 생태계인 “울루 테크노폴리스”를 건설
 - 인구 12만명의 소도시 울루는 2003년 노키아를 중심으로 740개 기업을 통해 5조원이 넘는 부가가치 창출(GDP 4%)

(사례) 독일의 폭스바겐과 볼프스부르크 지역의 상생

- 폭스바겐은 노사 및 市의 공동출자로 볼프스부르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AutoVision' 프로젝트 실시
 - 부품단지와 혁신캠퍼스 조성을 통해 창업활동과 기술이전 촉진
-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경제생태계를 재건설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폭스바겐도 수혜
 - 지역실업률 감소 : ('97) 17.2% → ('03) 8.4%
 - 6년간 100여개 기업유치, 200여개 기업 창업 → 23,000개 일자리 창출
 - 세계적 기업으로서의 기업이미지 제고

< 확장된 기업 개념 >



⇒ 지식창조를 위해 열린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핵심사업으로 확보한 수익을 기업생태계에 재투자하는 기업이 초일류기업

Ⅲ. 상생협력 발전모델

1. 상생협력 실패모델



① 협력업체의 역량을 잠식하는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 단기수익에 치중하여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고 협력업체의 역량개발을 위한 투자는 외면
- 대기업의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요구에 대해 협력업체는 임금 상승 억제, 비정규직 확대, R&D 축소, 설비투자 축소로 대응
 - 특히, 협력업체의 지급능력 저하는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능성을 차단
- 결국 협력업체의 혁신역량 저하로 부품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는 다시 대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 고리 형성

② 신뢰를 떨어뜨리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은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게 되고, 이는 결국 신뢰를 약화시켜 연결경쟁력 저하**

대표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 유형

- 협력업체의 임금인상시 협력업체에 초과이윤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
- 계약예정자의 원가산정자료를 타업체에 넘겨 경쟁을 부추기면서 추가적인 납품단가 삭감 요구

- 공동의 노력으로 창출한 성과를 대기업이 독차지하거나 환율 등 부담요인을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
- 정보의 비대칭성과 의사소통 부족으로 기회주의 만연

정보가 비대칭적인 기업간 거래에서는 각자의 이윤극대화 행위가 결국은 서로에게 불이익으로 귀결(G.Akerlof, 역선택 이론, 1970)

③ 기업생태계와의 단절로 인한 생태계 활력 저하

- **혁신네트워크 구축과 기업생태계에 대한 투자에 소홀한 결과 기업생태계의 활력이 저하되고 결국 대기업 경쟁력이 저하**

우리나라 사례

- 국내 대기업들은 중소벤처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미온적
 -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결과('04.6),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8%만이 모기업과 출자, 주식취득 등의 자본투자 측면의 협력 시행중
 - 혁신형 중소기업 부족, 자본투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에 기인
- 협력업체 비정규직, 저출산 문제 등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 미흡

2. 상생협력 발전방향



① 장기적 경쟁력 관점에서 협력업체의 역량개발을 지원

- 글로벌경쟁을 위하여 납품단가는 인하하되 협력업체가 단가 인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의 역량개발을 지원
 - 협력업체가 기술, 인력, 자금, 판로 등 혁신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 f(기술, 인력, 자금, 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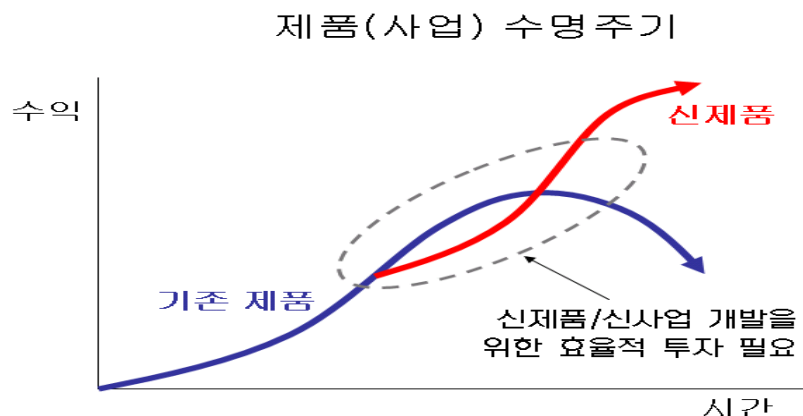
<분 야>	<주요 지원수단>	<지원효과>
기술	기술이전, R&D 역량개발, 신뢰성평가	➔ R&D ↑
인력	인력확보 및 HRD 지원	➔ 임금 ↑ 비정규직 ↓
자금	자금조달 및 현금결제 지원	➔ 설비투자 ↑ 생산성 ↑
판로	해외 공동마케팅	➔ 시장개척 ↑

② 공정거래와 성과공유를 통해 상호신뢰 구축

-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확립하여 협력업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기여
 - 윤리강령 채택, 실행프로그램 및 준법감시프로그램 마련 등
- 공정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환율 등 경쟁여건 악화시 고통분담원칙도 확립
- 수탁기업협의회 운영, 협력업체 간담회 개최 등 다각적인 의사소통채널을 마련하여 공급사슬 전체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

③ 열린혁신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 기업생태계와의 혁신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 신기술·신제품 공동개발, Corporate Fund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열린혁신네트워크 구축



- 기업생태계에 대한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기업생태계의 위기요인을 해소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

IV. 상생협력 실증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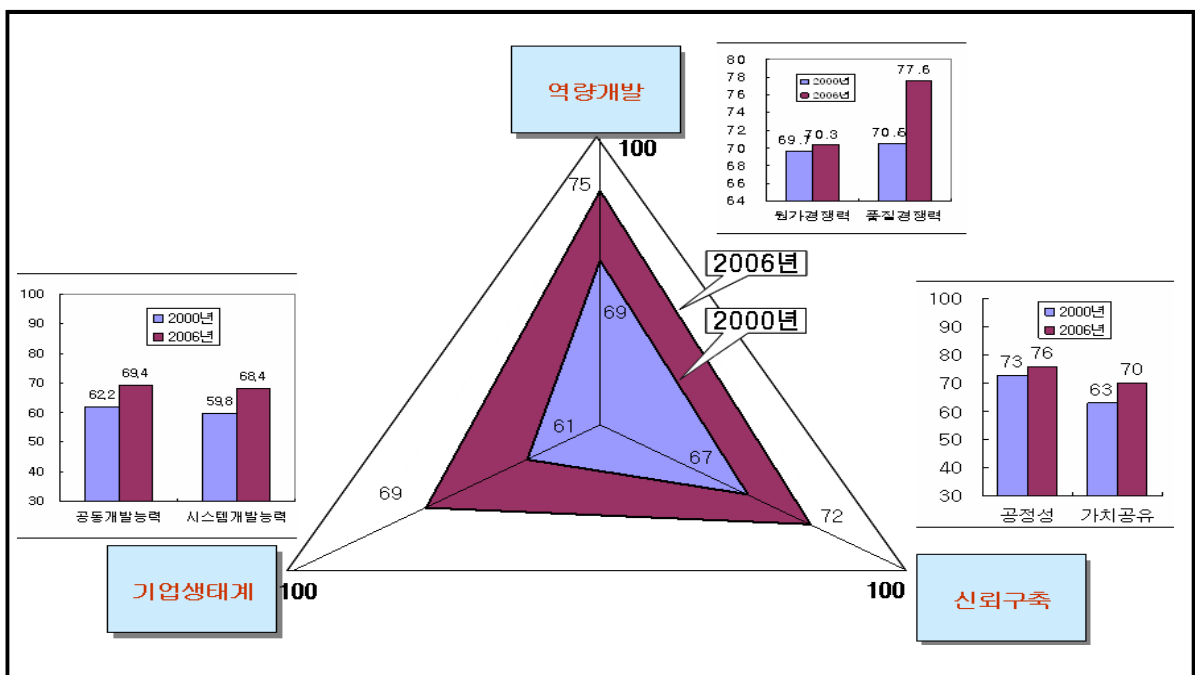
- ◇ 조사 대상 : 5개 업종, 7개 대기업, 218개 1차 협력업체
 - * (자동차) 현대차 (전자) 삼성·LG전자 (통신) SKT, KT (철강) 포스코 (조선) 현대중공업
- ◇ 조사 시기 : '06.4.18~28
- ◇ 조사 방법 : (대기업) 현장방문 인터뷰 (중소기업) 이메일 설문조사
- ◇ 조사 내용 :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 상생협력 발전추이

1.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만족도

- 2006년 현재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만족도는 부문별로 60~70점 대에 머무르고 있어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

- 역량 개발** 품질경쟁력은 2000년 대비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원가경쟁력은 고비용구조가 반영되어 거의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신뢰 구축** 2000년 대비 기업간 신뢰를 결정하는 가치공유 노력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70점대로 미흡한 수준
- 기업 생태계**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되는 기업생태계 조성은 60점대로 매우 취약하나 2000년 대비 현재까지 개선의 크기는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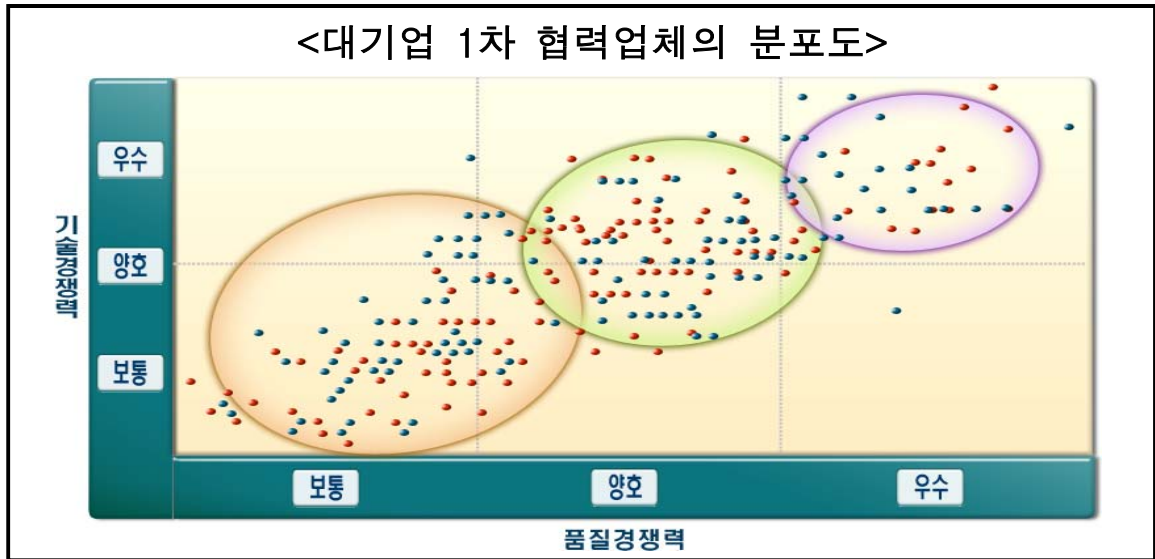
- 그러나, 2000년과 비교하면 조사시점인 2006년에는 전 부문에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2. 상생협력의 성과 → 중소기업 혁신역량 변화를 기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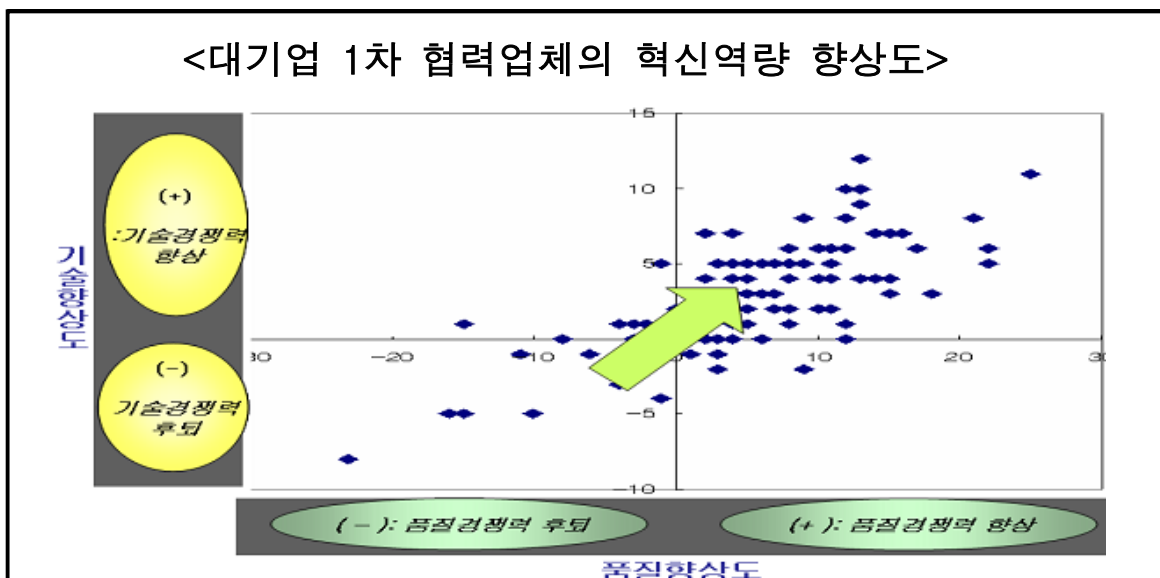
혁신역량 수준

- 2006년 현재 1차 협력업체는 대다수가 품질 및 기술경쟁력이 낮은 그룹에 분포하여 상생협력을 통한 개선의 여지가 많음



혁신역량 변화

- 2000년과 비교하여 2006년 현재의 혁신역량이 향상된 1차 협력업체가 많아 상생협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V. 상생협력 발전을 위한 제언

1. 기본방향 → 시장친화적이고 멀리보는 상생협력

시장친화적인 상생협력

- 대기업의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지향
- 유착과 담합이 아니라 소비자후생에 기여하는 협력을 의미

멀리보는 상생협력

- 단기 수익중시경영을 탈피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을 추구하는 지속가능 경영전략을 의미(Profitable Growth)
- 상생협력은 기업발전전략을 넘어 산업발전전략, 나아가 사회 발전전략으로 확대 발전되어야 함

2. 경제주체별 역할

대기업

- 상생협력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신념이 중요
- 전담조직 설치, 평가보상시스템 도입 등 制度化 노력 확대
- 역량개발, 신뢰구축, 기업생태계 혁신 등 상생협력투자 확대

중 소 기업

-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역량 확충
-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2·3차 협력업체로 확산

정 부

-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완
 - * 전속적 거래관계가 아닌 한, 특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으로 발생하는 성과의 일부가 다른 대기업에 귀착되는 외부효과 발생
-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법적·제도적 환경 개선

제 2 부

상생협력 정책평가 및 향후과제

I. 정책수단의 체계화

① 협력업체 역량개발 지원

- 협력업체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대기업이 비용을 지불할 경우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로 인한 외부효과로 시장실패 발생
- 협력업체 지원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인센티브로 보완

상생협력의 유형		정부의 역할
기술	기술이전, R&D역량개발, 신뢰성평가	비용 보전 리스크 분담 인센티브 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	인력확보, HRD	
자금	자금조달, 현금결제	
판로	해외 공동마케팅	

② 신뢰구축 지원

-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공정한 성과배분체계 확립을 위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패널티를 통해 불공정거래유인을 차단

상생협력의 유형		정부의 역할
가치공유	성과공유제	실천모델 개발 확산
거래안정	공정거래 확산	규제와 인센티브

③ 기업생태계 혁신

- 시장기능으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최적의 투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극적·소극적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 유도

상생협력의 유형		정부의 역할
열린혁신	핵심부품 공동R&D, 자본투자	R&D재원 확보, 규제완화
노동시장	비정규직, 저출산 공동대응	비용보전

II. 상생협력 지원정책의 평가

1. 정책 유형별 유효성 평가

① 협력업체 역량개발 지원

【 技 術 】

- 기술이전, R&D역량개발 등 기술확보 단계는 다양한 정책 수단 확보

기 술 확 보	휴면특허 이전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에 휴면특허 선별비용 지원 · 휴면특허 D/B 구축(1,616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자금 지원('05년 87개, 100억원) · 기술개발 성공시 대기업은 구매 우선고려

- 그러나, 기술확보 단계를 지나 양산단계로 진입하는데 필수적인 「신뢰성평가」 지원수단은 미흡

* 수요대기업에 의한 R&D단계의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양산라인에는 품질이 검증된 외국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사례 빈번

- 양산단계에서도 중소기업의 공정혁신을 지원할 정책수단 미흡

(사례 : 휴면특허 이전사업)

성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 한전, KT 등 3개사로부터 휴면특허를 제공받아 휴면특허 기술거래시스템 기구축 - '05년 한전 8건, '06년 태평양 5건 등의 기술을 유·무상 이전
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가 없어 대기업들이 기술무상제공에 소극적 - 실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공급자(대기업) 중심의 휴면특허 D/B 구축으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함 - 단순한 권리이전 만으로는 사업화가 곤란하여 중소기업 참여 미흡

【 人 力 】

- 제한적 범위에서 협력업체의 인력확보·인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수단은 구비

인력 확보	대기업 전문인력 중소기업 파견지원 사업	⇒	· 고용보험기금 인건비 지원근거 마련 (1인당 월 120만원 1년간 지원)
인력 개발	대·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움 사업	⇒	· 시설장비비, 인건비, 홍보비 지원 · '05년 17개 컨소시움, 33천명 지원

(사례 : 대·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움 사업)

성 과	- 대기업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대표적 사업으로서 기능인력의 숙련도 제고에 크게 기여
과 제	- 대기업의 참여 미흡(17개기업) - 교육훈련대상에 비정규직은 소외

【 資 金 】

- 수급기업투자펀드 도입으로 협력업체의 자금조달 여건은 개선
 - 현금성결제 확대로 협력업체의 자금운용 여건도 호전
- * 대·중소기업간 현금성결제 비중 : ('01) 50% → ('02) 58% → ('03) 71% → ('04) 86%

(사례 : 수급기업투자펀드)

성 과	- 협력업체가 무담보, 장기(3년), 대규모(업체당 40~70억원 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05년 117개 협력업체, 2,340억원 지원
과 제	-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으로 인한 경영권 부담, 고금리 구조(12%) 등으로 자금활용 유인 저조 - 협력의 주체인 대기업의 실질적인 참여 미흡

【 販 路 】

- 한전* 등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 협력업체 해외마케팅 지원
- * '02~'05년간 총 668개 협력업체 해외전시회 공동참가 등 지원(92백만불 계약)
- 대·중소기업 공동마케팅을 지원하는 본격적인 정책수단은 미발굴

② 신뢰구축 지원

【 성과공유제 】

- 지난해 성과공유제확산협의회 운영, 표준계약서 개발, 공기업 시범사업 등 확산기반 구축으로 성과공유제에 대한 관심 증가
 - *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 ('04) 1개사 → ('05) 5개사 → ('06) 13개사
 - *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도 성과공유제 도입 검토중
- 다만, 성과공유제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대다수 기업들이 낮은 수준의 「원가절감형 성과공유제」에 치중하여 확산에 애로
- 성과공유제가 우리나라 대·중소기업의 보편적인 계약모델로 착근되도록 다양한 발전모델 개발, 인센티브 확충 등 필요

성과공유제 확산에 필요한 정부의 인센티브 요청내용 (대·중소기업 설문조사)

- ① 성과보상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 대기업(73%), 중소기업(77%)
- ② 장기저리 융자 확대 ③ 협력관련 제도에 대한 규제완화

【 공정거래 】

- 불공정거래 개선대책 수립 등 정책적 노력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절대수준은 아직 미흡
 - * 하도급거래우수업체(100% 현금결제, 법위반없음) : ('04) 44개 → ('05) 88개
 - * 하도급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 : ('01) 71% → ('03) 63% → ('05) 58%
-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보다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 * '05년 시정명령 이상 49건 중 주요 대기업 관련사건은 3건에 불과
-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서는 현장조사나 처벌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자금·정부조달 등 다양한 인센티브와 연계 필요

③ 기업생태계 혁신

【 열린혁신네트워크 】

- 핵심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공동R&D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
 - * 부품소재 공동R&D 지원('00~'05) : 총 93개과제, 2,311억원
 - 수입대체 ·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협업체제는 여전히 미흡
-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규제완화('05.4월)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
 - 대기업의 지분참여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 확산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범사업을 발굴, 추진할 필요

【 노동시장 안정 】

- 중소기업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시장의 위기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상생협력 차원의 대책마련은 미흡**
 - * 중소기업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 ('05) 39%, 511만명
 - * 정규직-비정규직간 직업훈련 참여율 : (정규직) 14.3%, (비정규직) 2.3%
- 저출산 문제도 미래 기업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으나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체제는 미흡**
 - 특히, 대기업은 자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투자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수단 마련 필요

◇ '04년 이후 정부가 다양한 유형의 정책수단을 마련하여 지원한 결과 민간부문의 상생협력이 양적 · 질적으로 크게 확산

* 상생경영투자(10대그룹) : ('04) 6,400억원 → ('05) 8,30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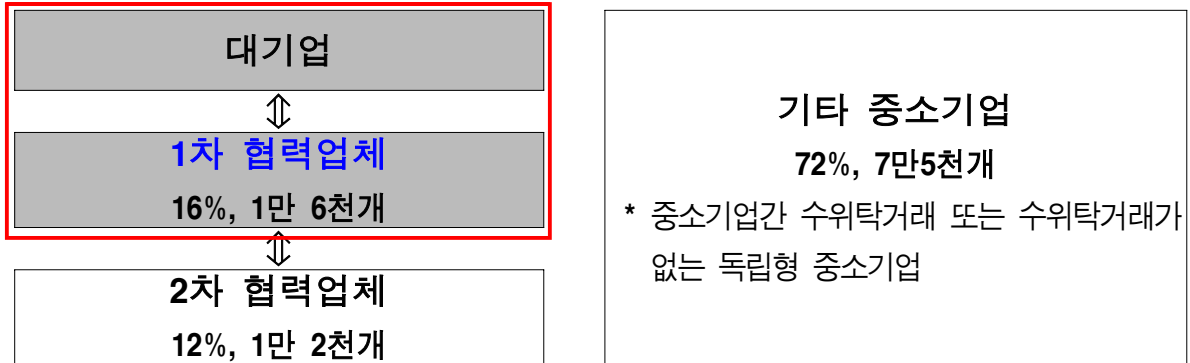
*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 ('04) 44개업체 → ('05) 88개업체

◇ 금년도 30대그룹 상생경영투자는 1조 3,63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1% 증가

2. 정책범위의 적정성 평가

- 그동안 상생협력은 제조업분야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간 관계, 특히 10대 그룹 주요계열사를 중점대상으로 논의

< 5인 이상 중소기업 현황과 상생협력 대상 >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04)

- 그러나, 제조업 1차 협력업체에 한정할 경우 정책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파급효과가 제한적

제조업 1차 협력업체 현황

-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중소기업)는 약 1만6천개로 5인 이상 중소기업의 16%를 차지('04년 기준)
- '04년 대기업 1차 협력업체의 대기업 납품액은 69조원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 매출의 23.7%에 해당

- 상생협력을 '산업발전전략'으로서 대기업 1차 협력업체의 범주를 넘어 대기업 공급사슬 전반으로 확산 추진할 필요

수직적 확산	· 1차 협력업체 → 2차 협력업체
수평적 확산	· 10대 그룹 주요계열사 →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 제조업 중심 → 유통·건설·에너지 분야로 확산 * 산업별 매출비중('04) : (제조업) 55% (유통) 19% (건설) 10%

3. 지원체계의 효율성 평가

① 정부

- 산자부, 노동부, 정통부, 건교부 등 각 부처가 소관분야에서 상생협력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 * (산자부) 상생협력 총괄 (노동부) 인력파견 (정통부) IT상생 (건교부) 건설상생
- 보다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부처간 유기적인 정책공조 체제 구축 필요

② 유관기관

- 대·중소기업 협력재단('04.12월),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05.10월) 등의 상생협력 지원조직이 확충되고 「상생협력기금*」도 조성
 - * 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등 5개그룹과 전경련이 215억원 출연
- 다만, 체계적인 역할분담과 상호연계 강화 필요

③ 대기업

-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담조직 설치 등 상생경영 추진체계 마련

상생협력 전담조직	포스코(중소기업상담센터), 현대차(상생협력추진팀), 한전(중소기업기술상담센터), LG텔레콤(PRM팀), 한화석유화학(BPS팀)
계열사 상생추진	SK(Business Relations 임원회의), 포스코(계열사 상생협력 위원회), 현대차(그룹 상생협력추진위원회)

- 다만, 현업부서 평가보상시스템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상생경영 제도화 노력은 미흡

Ⅲ. 향후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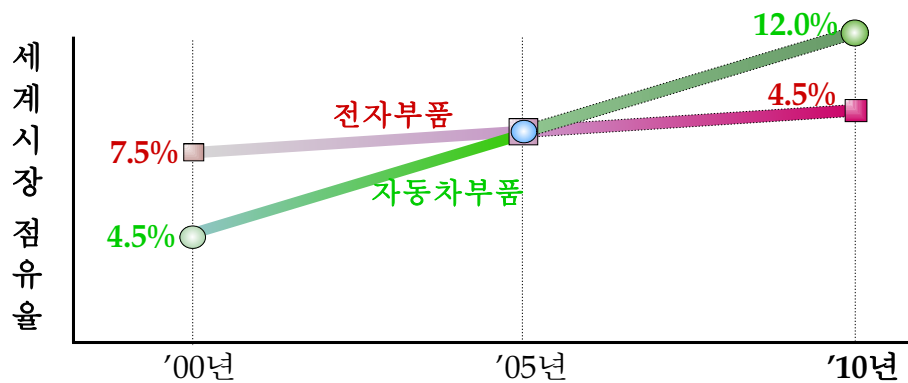
< 상생협력의 비전과 목표 >

□ 비 전 : 상생협력을 통한 선진 산업강국 조기 실현

□ 목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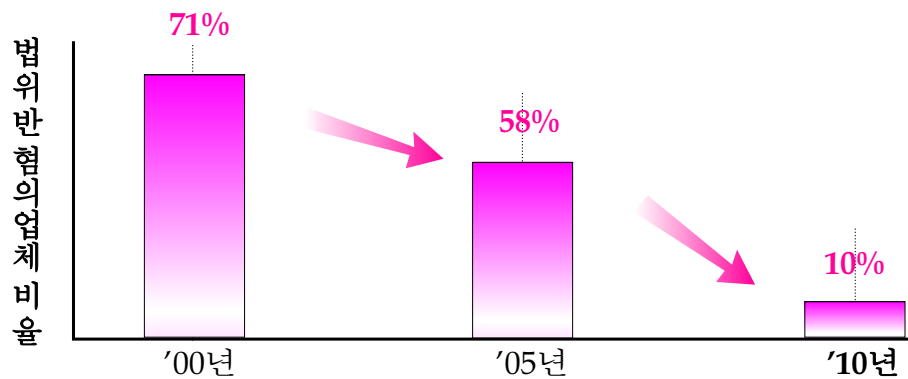
① 2010년까지 부품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

세계시장 점유율 - 자동차 : ('00) 4.5% → ('05) 8.5% → ('10) 12%
 전자부품 : ('00) 7.5% → ('05) 8.5% → ('10)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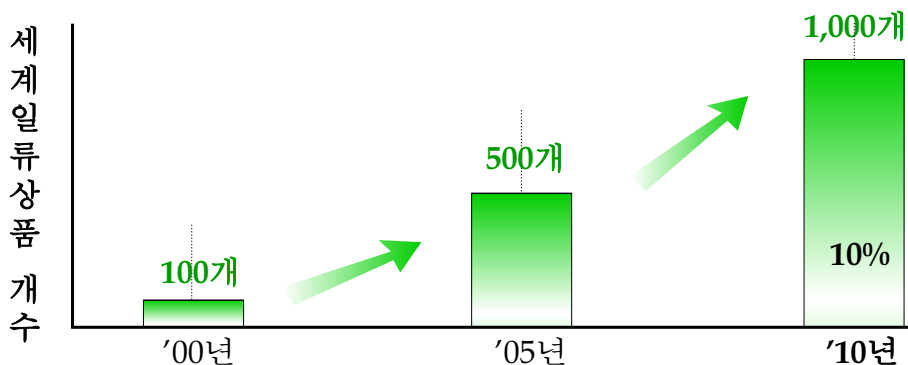
②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하도급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 : ('00) 71% → ('05) 58% → ('10) 10%(선진국 수준)



③ 열린혁신을 통해 2010년까지 세계일류상품 1천개 확보

세계일류상품 개수 : ('00) 100개 → ('05) 500개 → ('10) 1,000개



1. 핵심정책의 유효성 제고

① 성과공유제

□ 기본방향

-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제의 개념을 재정립

부품·공정개선, 부품국산화 등 협력활동의 성과를 현금배분, 납품가조정, 공동특허출원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상호 분배하는 제도

- 기업실정을 감안하여 성과공유모델의 다양화 및 고도화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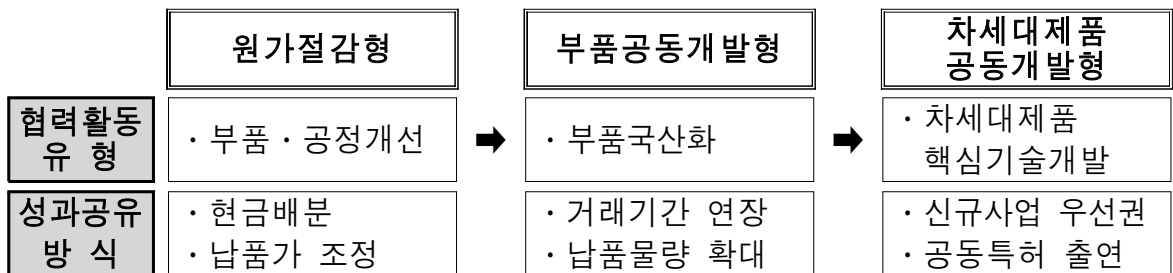
- * 성과공유 유형 설문조사 결과 (8개 대기업, 49개 성과공유 사례)
 - (협력활동 유형) ①부품·공정개선(53%) ②부품국산화(31%) ③차세대기술 공동개발형(16%)
 - (성과공유 방식) ①납품가조정(49%) ②장기계약(23%) ③현금배분(21%) ④물량확대(6%)

□ 세부 추진과제

- 성과공유 모델의 다양화 및 성과공유 방식의 고도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진밀도 정도에 따라 '원가절감형' → '공동부품개발형' → '차세대기술 공동개발형'으로 발전
- 성과공유 방식은 현금배분·납품가조정 → 공동특허 출원 등으로 고도화

< 성과공유제 발전방향 >



- 정부는 성과공유제 확산 및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업종별 표준계약서 개발, 교육·홍보, 확산협의회 운영 등

※ 성과공유제 유형별 사례

① 원가절감형 (POSCO - (주)우진)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씻물 온도측정용 Probe 제조방법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협력활동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SCO) 6시그마 교육, 컨설팅 지원, Test 환경/결함원인 분석, 해당설비 know-how 전수 등 · (우진) 자동화센서 설계 Lab Test, 정련로 실적용 Test
성과공유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배분 : 3년간(1년차 중소기업 100%, 2-3년차 50%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년에 우진에 원가절감분 12억원(현금) 배분 · 거래기간 연장

② 부품공동개발형 (현대자동차 - (주)모토닉)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차량에 들어가는 LPI-Pump module을 국산화하여 원가절감 및 수입대체효과 달성
협력활동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차) 기술개발 전문인력 파견, 현장인력 전문기술교육, 기술개발 연구용 차량 제공, 기술개발자금 10억원 지원 · (모토닉) 신기술 연구개발(모기업·산학연), 시험평가 및 양산설비 투자, 해외벤치마킹 및 선행기술 조사
성과공유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품가 조정 : 부품단종시까지 원가절감분 50%씩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년에 원가절감분 72억원을 36억원씩 공유 · 납품물량 확대 · 거래기간 연장

③ 차세대제품 공동개발형 (KTF - 케이비테크놀러지(주))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WCDMA 단말기에 삽입되는 USIM칩 제조기술 자체 개발 및 상용화 추진중 ('06.2월)
협력활동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자금 공동투자, 기술 know-how 공유, 기술개발인력 교류, 공동 test, 상용화 추진 등
성과공유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특허 출원 : 공동기술개발 성공시 추진 · 납품물량 확대 : 상용화시 국내외 판로 지원

② 수급기업투자펀드

□ 기본방향

- 대기업이 리스크 분담에 새로이 참여하는 펀드구조로 전환
➔ 지원금리 인하
- 기술력은 우수하나 신용대출이 곤란한 기업중심으로 지원대상 재조정

□ 세부 추진과제

- 펀드 지원조건 개선 : (B+ 기준금리) 12% → 7%
 - 대기업의 보증기관 출연 및 보증기관 부분보증(50%)을 통해 수급기업이 부담하는 금리인하 추진 검토
 - * '06년 하반기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우선 추진후 타업종으로 확대
- 지원대상 업체 재조정 : 1차 협력업체 → 2·3차 협력업체 포함
 - 기술력은 우수하나, 신용대출이 곤란한 1·2·3차 협력업체 지원
 - * 수급기업펀드 수요조사 결과, 반도체·디스플레이 1차 수급기업의 수요는 10% 수준이었으나, 2차 수급기업은 45% 이상 참여를 희망

< 수급기업투자펀드 개선방향 >



③ 부품소재 공동개발

□ 기본방향

- 단순 기술협력 파트너십을 인력·지식·가치 등 기업내부자원을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전환
- R&D기획→생산→구매 등 전주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리스크 분담 및 성과공유



□ 세부 추진과제

- 정부의 기술개발과제 선정시 대·중소기업이 인력·정보 등 내부자원을 공유하는 과제 우선 지원
- R&D 관련규정 개정을 통한 전주기적 협력관계 유도
 - 수요 대기업의 구매확약요건 강화
 - *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료 대납방안 검토
 - 개발제품 공동마케팅 등 수요대기업의 지원조항 신설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개정)
- 부품·소재 R&D 중 대·중소기업 공동개발사업 비중 지속 확대
 - ('05) 805억원, 53% → ('06) 1,080억원, 60% → ('07) 1,300억원, 65%

④ 휴면특허 이전

□ 기본방향

- 중소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대기업 휴면특허 발굴 및 DB 구축
 - 공급자(대기업) 중심보다는 가급적 중소기업이 이전을 희망하는 특허를 중심으로 「대기업 휴면특허 DB」 구축
- 휴면특허의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기술개발, 금융 등 지원
 - 권리이전만으로는 즉시 사업화하기가 곤란할 뿐 아니라 대기업 개발자의 퇴사 등으로 추가적인 기술지도 필요
- 이전방식은 유상과 무상을 병행하여 대기업의 참여도 제고

□ 세부추진과제

- 「휴면특허 거래시스템(sp.ntb.or.kr)」 전면 개편
 - 중소기업의 이전희망 특허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 * 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거래소 등을 중심으로 Inno-Biz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수요 조사 실시
 - 전경련 등을 중심으로 대기업 이전대상 휴면특허 발굴
 - 대학·연구소의 미활용특허를 발굴하여 거래시스템에 등록
- 기술·금융 등 휴면특허의 사업화 연계 지원 강화
 - R&BD 사업 등과 연계하여 휴면특허의 사업화 지원
 - 특허평가보증(기보), 특허기술사업화(중진공) 등을 통한 자금 공급
 - “기술신탁제도”(현재 용역중)과 연계하여 휴면특허 활용도 제고

2. 새로운 정책수단의 발굴

① 반도체 · 디스플레이 장비 · 재료의 자립기반 구축

□ 사업목적

- 반도체 · 디스플레이는 우리 수출의 17.6%를 차지하나 국내 부가가치는 50% 미만

* 수입유발계수 : 반도체 0.503, 영상기기 0.478, 자동차 0.271, 조선 0.317

* 국산화율 : (반도체) 장비 18% · 재료 40% (디스플레이) 장비 36% · 재료 50%

< 국내 장비·재료 산업 현황 및 문제점 >

구분	국내 장비·재료 산업의 현황	문제점
원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업체의 1/50 수준의 영세한 규모 * 매출: (美AMAT) 10조원, (주성) 2,023억원 · 원천기술 부재로 특허대응력 취약 * 미국 특허권: (AMAT) 1,230건, (주성) 5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투자곤란 * 평균 장비개발비: 100~500억원 · 시장진입 차단, 막대한 로열티 지급 * 최대 매출의 10%내외 지불(주성)
양산 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직계열화된 구매구조 · 신뢰성이 검증된 마일 제품 우선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의 경제 곤란 및 신규진입 제한 · 기술개발 성공후에도 판로 제한

- 원천기술 부재, 대기업별 거래처 구분, 신뢰성 미흡 등으로 R&D (시험라인) 단계의 협력수준에 머무르고 양산단계의 협력은 미흡

< 장비·재료 상생협력 추진현황 및 시장실패 >

시장자율적 협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장비 Copy 제품의 개발-납품 · 양산라인 以前 시험라인 단계에서의 장비 공동개발
시장실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기술 부재 → Copy 제품 생산 → 특허분쟁 · 대기업별 거래처 구분 → 영세성 → 대규모 선행투자 곤란 · 신뢰성 미흡 → 양산라인 투입 배제 → 개발기술 사장

- 이에 따라, 민간 자율의 협력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원천기술의 장벽”과 “양산라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솔루션 지원 추진

□ 사업내용

장비·재료 업체에 대해 대기업·정부 공동으로 「원천기술 상용화 개발 → 신뢰성 평가 → 인증 → 양산라인 투입」을 일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구분	기술		생산		마케팅		
	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시험라인 평가	양산라인 평가	인증서	대기업 구매확약	해외수출
차세대 장비·재료	산·학·연 정	→	→	→	→	→	→
수입대체 장비·재료	업체	자체개발	→	→	→	→	-

① 원천기술 장벽 해소 → 장비·재료 원천기술 공동기술개발

- 산·학·연 원천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반도체장비(45~32nm급) 공동 기술개발 및 국제특허 확보
- 수요 대기업이 초기단계부터 개발대상 장비 선정 → 공동개발 → 신뢰성 평가 등에 직접 참여하고 사전에 구매 확약

② 양산라인 장벽 해소 → 수요대기업에 장비·재료 평가라인 구축

- 대기업의 시험·양산라인을 중소 장비·재료업체에 개방하여 수출·신뢰성 등을 평가-인증-구매하는 지원시스템 구축
 - 1차 성능평가 : 균일성, 공정속도 등 평가(대기업 시험라인 또는 중소기업)
 - 2차 양산평가 : 생산수율, 신뢰성 등 대량생산 핵심요건 평가(대기업 양산라인)
- 평가라인을 기존 계열화된 협력업체 외에도 신기술 개발업체에 개방
 - 차세대 장비·재료 : 원천기술 개발과 연계하여 평가·인증·구매 일괄 지원
 - 수입대체 장비·재료 : 기보유 기술의 양산테스트 서비스

② IT를 활용한 공급사슬의 생산성 혁신

□ 사업목적

- 부품설계 · 생산 · 납품 등 공급사슬 전반에 IT기술을 적용하여 공급사슬의 생산성 혁신

* K자동차 · 협력업체의 '재고 · 물류관리시스템 IT화'로 연간 K자동차의 재고비용 15억원 절감, 중소기업의 운송비 160억원 절감

* S전자 · 협력업체간 IT활용생산으로 S전자는 12억원, 중소기업은 30억원 수익 창출, 불량률 20% 감소 등 기술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설계 · 생산 · 납품 등 단계별 IT 협업시스템 구축

설계 · 생산단계

3D 설계 등 IT기술을 제품생산 전과정(제품기획, 부품설계, 부품생산, 불량해결)에 활용하는 인터넷기반 생산 · 설계공정 구축

납품(재고 · 물류) 단계

무선인식기술(RFID)를 활용하여 대기업 · 중소기업간 주요 생산정보(생산계획, 재고, 입 · 출고지시)의 실시간 공유체제 마련

- 자동차 · 전자 · 조선 등 15개 업종별 시범 적용모델 개발

- '06~'08년간 매년 5개 업종씩 총 400억원 지원

③ 대·중소기업 공동마케팅 지원

□ 사업목적

- 대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 중소기업은 안정적 물량확보를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

□ 사업내용

- 대·중소기업 합동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금년 하반기부터 일본 부품소재산업전 등 주요 해외전시회 공동 참가 및 합동 투자설명회 개최 추진
- 중소기업의 대기업 글로벌 네트워크 편입 지원
 - 7개 업종별 상생마케팅협의회 구성·운영('06. 하반기)
 - 업종단체 중심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KOTRA, 무협 등 참여
 - 세부 아이템별 전문협의회 구성·운영
 - 해외기업정보 제공, 거래 알선, 계약 지원 등
- 해외플랜트 공동진출 지원 ⇒ 5년간 62억불의 기자재 수출 예상
 - 플랜트 사업타당성조사(F/S) 수행시 대·중소기업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비용 지원 확대 : (현행) 50% → (확대) 75%
 - 벤더협력협의회('06.4월)를 통해 중소기업 기자재 사용비율 제고 유도
- 대기업, 종합상사 등의 퇴직자중 마케팅 전문가를 수출중소기업과 매칭시켜 업종별 타겟마케팅 지원
 - 금년중 50명 우선 선발 예정(약 150여개 중소기업 지원 예정)
 - * 퇴직수출유경험자 pool 구성 및 KOTRA내 상설 인력중개센터 설치 추진

3. 상생협력 정책범위의 확대

① 10대그룹 → 30대그룹으로 확산

○ 금년부터 30대그룹 주요계열사도 상생경영에 적극 동참

G S	협력회사 멘토(Mentor)제도 지속 확대('05년, 150개사)
현대중공업	성과공유제 도입, 조선기자재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한 화	중소기업 경영지원 BPS팀 신설('06.4월), 벤처인큐베이터 운영
금호아시아나	「협력사와 함께 아름다운 미래로」 프로젝트 추진중('06.1~8)
L S	전력산업 투자조합 출자('06.5월, 12억원)

○ 그러나, 10대그룹에 비해 11~30대그룹의 상생경영투자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 10대그룹 상생경영투자는 1조1,369억원으로 작년대비 36.7% 증가
30대그룹 상생경영투자는 1조3,635억원으로 작년대비 31.1% 증가
- ➔ 11~30대그룹 상생경영투자는 2,266억원으로 작년대비 8.7% 증가

그룹별 상생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

	'05년	'06년	증가율
10대그룹	8,317억원	1조 1,369억원	36.7%
11~30대그룹	2,084억원	2,266억원	8.7%
30대그룹	1조 401억원	1조 3,635억원	31.1%

○ 10대그룹의 상생분위기와 성공사례를 30대그룹으로 확산

- 산자부장관,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 회의」 개최('06.6월)
 - 상생협력 발전모델 및 성공사례 공유
 - 상생협력 발전을 위한 대·중소기업·정부의 역할 정립

② 1차 협력업체 → 2차 협력업체로 확산

○ 대기업 2차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협력 실태조사 결과

조사개요

- '06.5월, 산자부·중기청 공동 현장방문조사

조사결과

- 대기업이나 1차 협력업체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50%에 불과
- 지원분야도 2차 협력업체의 장기적 경쟁력과 관련되는 기술지원 보다는 계약관계의 이행을 위한 품질·생산성 지원에 치중
- 2차 협력업체의 교섭력이 낮아 공정거래가 협력의 핵심이슈
 - *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 : (1차 수급기업) 28%, (2차 수급기업) 76%

○ 대기업의 1·2차 협력업체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확대 : 1차 협력업체 → 2차 협력업체
 - * ('05) 위탁기업 1,016개 → ('06) 위탁기업 1,000개, 수탁기업 1,500개
- 현금·어음과 마찬가지로 「어음대체결제」에 대하여도 60일 초과 결제시 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규정

○ 상생협력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 1차 협력업체 평가시 2차 협력업체 지원실적을 평가지표에 추가(SK그룹의 가산점 제도) 등 모범사례 확산 유도
- 대·중소기업 환경경영협력(Green Partnership), 수급기업투자 펀드 등 협력프로그램을 2차 협력업체로 확대 추진

③ 제조업 ⇒ 이업종으로 확대

가. 유통산업

□ 기본방향

- 유통-제조업체간 협력과 대·중소 유통업체간 협력으로 구분
 - * 대·중소 유통업체간 협력은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간 경쟁관계로 인해 근본적으로 자발적 상생협력에 한계가 있음(시장실패)

□ 세부 추진과제

유통-제조업체간 협력

-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 유도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병행 실시
 - * 대형유통점 조사 기 실시('06.4월, 39개사), 납품·점포임차업체(약 3천개)는 6월중 실시
- 「유통산업 상생협력박람회」를 개최('07.5월), 중소기업 판로 지원

대·중소 유통업체간 협력

- 대형유통업체(이마트, 홈플러스 등 8개)를 통해 재래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에 대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실시('06. 총 20회)
- 대·중소 유통업체가 공존하는 복합상권 조성·지원을 위한 「상권중심지 활성화법」 제정 추진('06. 하반기)
- 3대 권역별로 「대·중소 유통업 상생협의회」 구성·운영('06. 하반기)

나. 전력·전기산업

□ 기본방향

- 한전 등 전력산업 수요 대기업들이 투자조합을 결성, 전력·전기 분야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 우수 중소·벤처기업은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기술의 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기업가치를 제고
 - 한전 등 수요처는 우수제품을 납품받아 전기 및 완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벤처투자 성공시 투자수익 창출

□ 세부 추진과제

- 전문투자조합 결성 추진
 - 정부 150억원, 한전 등 전력공기업 11개사 82억, 민간대기업 3개사(LS산전, 효성, 현대중공업) 32억 등 총 264억원 출자
 - * 전력·전기분야 최대 구매자인 한전 등 전력공기업과 민간대기업이 직접 출자함으로써 기술개발-투자-판로확보 등 3부문을 유기적으로 연계
 - 이를 기반으로 시중자금을 유치, 총 500억원 이상을 조성하여 각 250억원 규모의 2개 조합 결성을 추진
 - * 투자조합 특징 : 전력·전기분야 중소벤처기업에 80%이상 투자, 7년 존속, 3년내 결성금액의 60%이상 투자 등
- 신기술인증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도 확산

<전력·전기산업 상생협력협약 체결('0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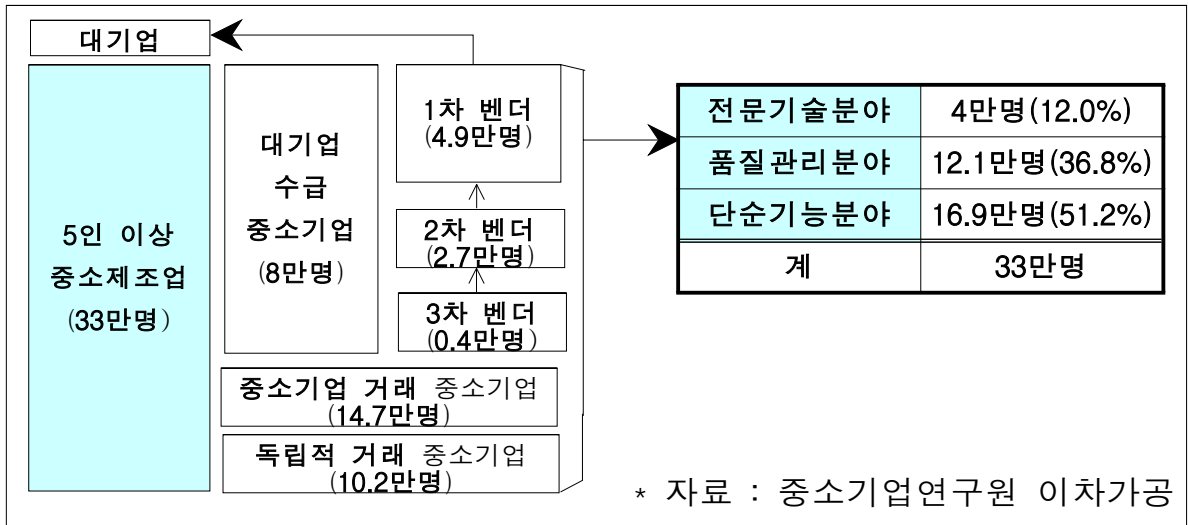
한전 등 전력공기업, 민간대기업 등이 투자조합 출자, 신기술인증제품의 우선구매, 중소·벤처기업 기술·경영지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양성 및 상생협력 추진

4. 사회발전전략으로 확산

① 중소기업 비정규직 역량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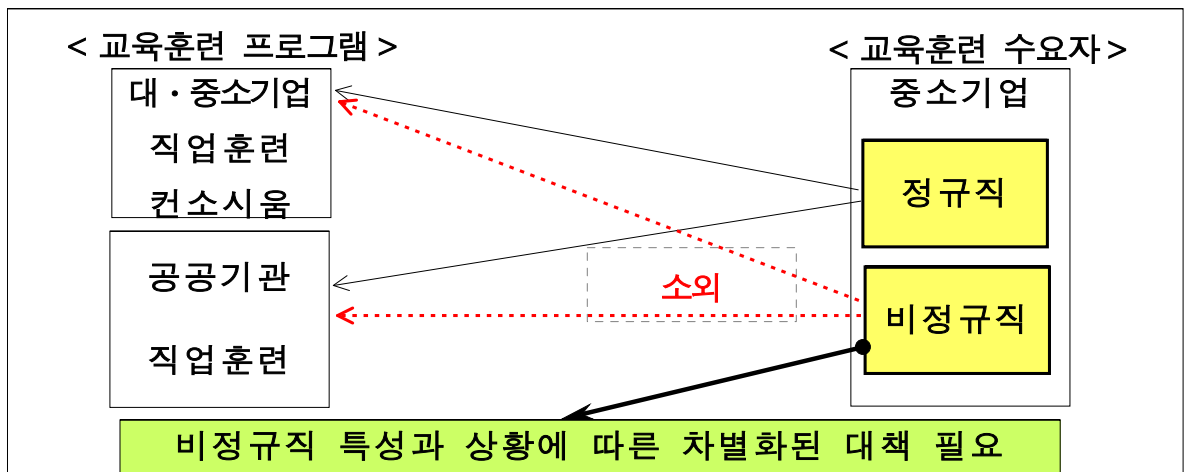
□ 중소기업 비정규직 현황(정책 대상의 분석)

-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33만명으로 추정
- 능력개발 필요성이 높은 기술·품질관리 직무에 약 16만명(49%)이 종사



□ 중소기업 비정규직 능력개발 필요성

-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는 시간·공간적 제약으로 현행 직업능력 개발 훈련체제에서 소외(직업훈련참여율 : 2.3%)
-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 저하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중소기업 비정규직 비율 : 39%, 511만명)



□ 중소기업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방향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 지원

① 전문기술직

사업 방향	○ 지역별 · 업종별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사업 내용	○ 지역별 대학 · 연구소 · 센터 및 대기업과 연계 추진하되, 시설치된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지역협력연구센터(RRC) 등을 활용 (대기업 · 정부 재원분담)
추진 체계	○ 주관 :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 수요조사 · 시행 : 업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② 품질관리직

사업 방향	○ 대 ·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움사업 확산
사업 내용	○ 참여대기업 확대 : 8대 그룹 → 30대 그룹 ○ 비정규직 참여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차등 지원
추진 체계	○ 주관 : 지방노동청 ○ 컨소시움 구성 · 운영 : 대기업

③ 단순기능직

사업 방향	○ 공공교육훈련 및 근로자 개인훈련 지원
사업 내용	○ 공공교육훈련(이동식 방문교육, e-러닝 등) 및 개인훈련계좌제 실시
추진 체계	○ 공공교육훈련 : 직업전문학교, 한국폴리텍 ○ 개인훈련계좌제(ITA) : 훈련과정 선택수강



G.W.Bush 미 대통령은 연두교서('06.1.31)를 통해 미국 경쟁력 강화구상을 발표하면서 철강, 자동차 업계 연쇄파산과 무역적자 타격을 위해 실직자 · 이직 희망자에게 신 기술 습득비용을 연 3천불까지 지원하는 '자기경력개발계좌제도' 도입계획 제시

② 저출산 공동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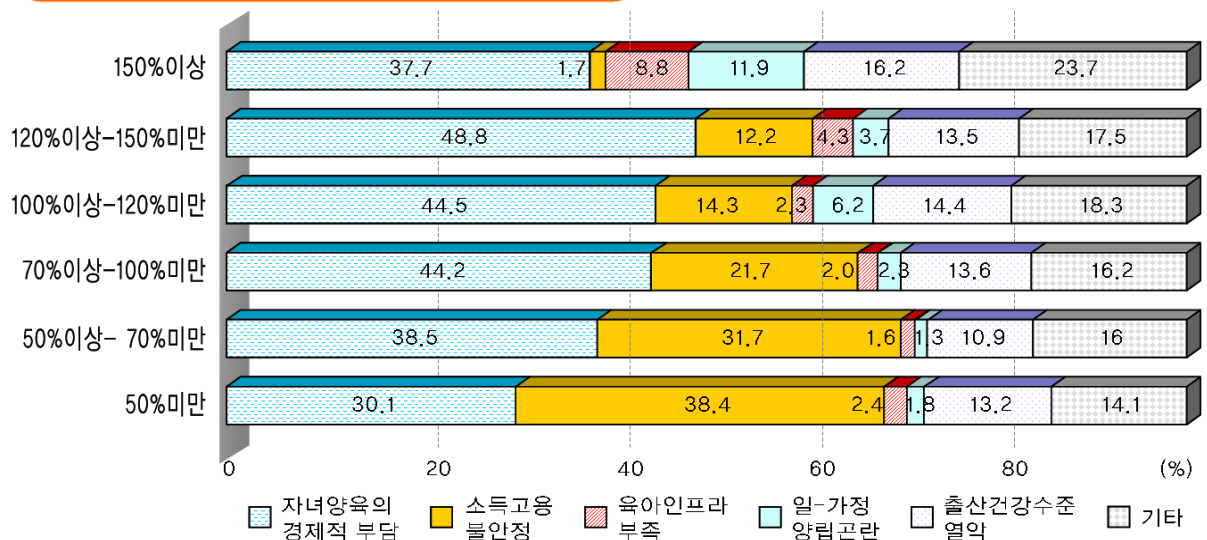
□ 기본방향

- 저출산 문제가 장래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중요변수로 부상
- '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후 '01년 부터 초저출산사회로 진입

* 현 추세 지속시 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전망

- 저출산은 ① 자녀양육비 부담 ② 소득·고용 불안정 ③ 육아 인프라 부족 ④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

➔ 소득수준별 출산중단 이유(2자녀 이하)



*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2006

- 저출산 대응은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과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사회적 부담경감이 관건

- 대기업도 장기적 기업경쟁력 관점에서 중소기업 직장보육 인프라 확충과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관심과 투자 필요

* 170개 대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보유(30대그룹 직장보육시설 공실률 : 23%)

* 17개 국가산업단지 중 보육시설을 갖춘 산업단지는 7개에 불과

➔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인프라는 극히 취약

□ 세부 추진과제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확충

- 대기기업의 직장보육시설을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에 개방 유도
 - 산자부·노동부·여성가족부 공동으로 실태조사 추진('06 하반기)
 -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교재비 지원확대 검토
- 산업단지내에 보육시설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종합복지센터」 건립 추진(고용보험기금 활용 검토)
 - 여성고용율과 정착율이 높은 상위 3개단지(구로, 반월, 구미)를 대상으로 수요 및 실태조사 실시('06 하반기)

공공부문이 솔선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유아를 둔 직장인의 재택근무 및 탄력근무제 실시 권장
- 자녀수에 따른 「가족수당 누진제」 도입 검토
- 자녀수에 따라 휴가일수 산정기준 현실화

가족친화경영 활성화

- 가족친화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가칭) 「가족친화기업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세제 등 범정부차원의 인센티브 마련
(예) 다자녀가구 채용비율이 높은 기업 등 우수기업 세제지원, R&D 등 정책 자금 우대, 공공조달 우대 등
 - 우수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기업인증제」 도입 검토

IV.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확립

1. 정책 추진체계 정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 각부처 사업 총괄조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하반기중 총리 소속하에 설치

○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부처간 역할분담 실시

총리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 운영
산자부	상생협력 총괄, 각부처 계획 점검, 상생실태조사
중기청	협력프로그램 분담·운영,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총괄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중기청과 협조) 및 규제
노동부	전문인력 중기파견사업 추진,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움 운영
정통부	IT분야 상생협력
건교부	건설분야 상생협력

○ 불공정거래 규제와 관련한 정부부처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 참여부처 : 공정위, 산자부, 재경부, 건교부, 정통부, 조달청, 중기청, 금감원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전경련 중기협력센터 등 상생협력 유관 기관간 역할분담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2. 상생협력 지식커뮤니티 구축

□ 필요성

-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상생협력은 2차 협력업체 · 이업종 등을 포괄
 - 향후 상생협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필요
 - * 기존 상생이론은 주로 외국이론을 중심으로 경제학과 경영학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우리 실정에 맞는 이론적 틀은 아직 취약한 실정
-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기업과 경제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Think-tank」 필요

□ 추진방향

-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산하에 「상생협력연구회」 설치

성격

- 지식커뮤니티를 총괄하는 상생협력의 브레인기능 수행
-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산하기구로 설립

기능

- 상생협력 지식인 D/B 구축, 상생협력 커뮤니티 구축, 상생협력 이론 연구, 학술대회, 국제컨퍼런스 등

재원

- 30대그룹과 정부가 공동으로 연구기금 조성

일정

- 연구회 설립 세부계획 수립(6~7월)
- 연구회 설립(연내)

- 상생협력연구회를 통해 「상생협력 발전모델」을 수정·보완
-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 개최('06.10월)
 - C.Fine 교수, T.Fujimoto 교수 등 석학 초청